

인사 감사 일부개정안 의결

文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신임 장관 상견례 진행 성범죄 신고 묵인 기관명 인사처 홈페이지에 게시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미작동시 벌금 13만원 부과 군 사망사건 조사시 유족 측 변호사 선정·조력 제공

정부가 성폭력·성희롱 사건 신고를 받고도 묵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인사처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승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칙금 13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 군 검찰이나 군사법경찰관이 검시하거나 유족을 조사할 때, 장자와 유족을 위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변호사

를 선정해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개정안을 처리해 앞으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는 공직 내 성폭력·성희롱 고충 사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울러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그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중징계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임명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해 다른 국무위원들과 상견례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는 11일 열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수 없게 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기념식 전날인 10일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강원 지역 산발 피해자를 위로하고, 피해주민들이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진화에 기여한 정부와 민간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언급도 내놓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임시정부 기념식, 강원 산발 사후 대처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조류독감(AI)과 구제역을 잘 방역했듯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 해외 다녀오는 분과 세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게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발병국 여객기에 대해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개인 휴대품 조사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전북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취임식 전북도가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읍·면 의용소방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82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는 '전북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열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권익위, 부패신고자 42명에 보상금 3억 지급... 정부, 27억 절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9일 연구비 횡령,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42명에게 총 3억 60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국가·공공기관 등이 직접적으로 회복하거나 절감한 비용은 27억7230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 금액의 9분의 1 가량을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권익위는 수도사업소에 특허 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도 일반 타일을 납품해 차액을 가로챈 업체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700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단일 부패신고로는 가장 많은 보상금이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

입하는 등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4133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해당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 사건을 이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로부터 1억5650만원을 환수했다.

이 밖에도 버스노선 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횟수 조작 등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버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33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원을 지급했다.

또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 신고자에게

402만원의,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해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 신고자에게는 112만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원, 20억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나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2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며 "신고문화를 확산해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군산시가 9일 이승복 부시장과 차주하 전북도 투자금융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미래이앤아이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 '집중'

군산시, 재생에너지 유망기업 미래이앤아이와 투자 협약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군산시에 신산업 분야의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9일 이승복 부시장과 차주하 전북도 투자금융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미래이앤아이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주)미래이앤아이는 재생에너지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앞서가는 기술력

미래이앤아이(주)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꾸준히 연구·개발 하고 품질관리, 신속한 납기, 철저한 A/S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금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기업들이 생산 활동에 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해 군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동포들의 비밀 활동, 일제와 맞설 수 있었던 '원동력'

국가기록원, 임시정부 지원 비밀조직·인물 기록물 발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활동한 임시정부의 비밀조직과 인물들의 기록을 담은 책자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책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펼친 활동과 임시정부를 지원한 다양한 국내 활동을 담았다.

제1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변천'에서는 임시정부의 출발에서 환국까지 활동을 상세히(1919~1932), 이동시기(1932~1940), 중경시기(1940~1945) 등 시기별로 구분해 서술하고 그 의미를 밝힌다.

제2장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펼친 다양한 독립운동을 정리했다. 망명지에서 지방행정조직으로서 연통부와 교통국 체제를 구축해 나라 안팎으로 연결망을 있고, 국내로 비밀요원을 파견하고, 군자금 및 공작원을 모집해 선전활동과 의열투쟁을 하는 것 등이다.

제3장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한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등 국내의 독립운동 조직과 다양한 활동을 소개한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판결문은 임시정부의 국내 활동과 이를 지원한 국내 조직과 인물들의 구체적 독립운동을 볼 수 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이 책을 통해 임시정부가 중국 곳곳을 옮겨 다니면서도 일제와 맞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국내 동포들의 비밀 활동과 후원 때문에 가능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과 그들의 항일 활동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